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다시 부결...자동 폐기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1명  
민주, ‘플랜B’ 등 고심...강경론·절충론 등 ‘분분’  
군소야당들, 공동교섭단체 통한 ‘상설특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날 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플랜B’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카드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이 부결·폐기될 경우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로 발의하는 ‘채상병특검법’에 아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또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일뉴스

을 못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우회하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

는 상설특검법 활용은 야권이 꺼낼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주장과 맞물려 군소 야당 일각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방안도 거론된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1석), 사회민주당(1석) 등 6개 당이 모여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7개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5월 이번 국회의 첫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고 이날 부결로 또 다시 폐기됐다.

김진수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모집 플랫폼 다양화 추진

영암군, 3억9천만원 모금했지만 활용하지도 못해  
서삼석 “지자체도 민간플랫폼 구축할 수 있어야”

기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5일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에 착안,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

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영암군은 2023년 11월27일~2024년 1월1일 민간 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12억3천610만원)의 30%인 3억9천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1년간 모금된 금액



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원에 비해 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 접수·답례품 확인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 안도걸 ‘ACC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사진)이 25일 ‘I-PLEX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대전환을 논의하는 ‘ACC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ACC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의 대표적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로서의 연구·조사 기능이 강조되면서 창·제작 인프라 구축이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세미나 기조발표는 문화융복합학회 장 이승권 교수, 조선대학교 최종일 교수, 브이랩2인경숙 대표가 맡는다. 토론 자로는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 이담금 예술이벤트그라운드 대표, 배상현 조선대학교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ACC가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지이자 연구·창작·제작의 열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가 밝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신정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장·



한 것이 골자다. 신정훈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행정부 견제, 사회적 이슈 대응 등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됐으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이 강화될 것이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